

野 단일화 속 예측불허 대접전 예고

친이-친박 ‘계파 해체’ 될까

한나라 내일 최고위서 확정 방침... 실효성 미지수

7·28 재보선 D-1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6일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전략지역에 총출동, 막판 표밭 다지기에 총력을 쏟았다.

서울 은평을의 경우 이날 민주당 정상 후보가 국민참여당 전호선 후보를 따돌리고 단일후보로 나섰다. 충북 충주에 이미 민주당 정기영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더욱이 이 두 곳은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후보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후보가 출마,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성이 부각돼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관심을 끈다.

은평 을·충주 野 후보단일화 영향력 관심 여야 전략지 총출동 막판 표밭다지기 ‘울인’

안상수 대표도 이날 강원도 영월 선거사무소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단일화 여론조사를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백하니 중앙선관위는 즉시 이를 중단시키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 국민의 투표권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야당=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서울 은평을과 충주의 야 3당 후보 단일화로 승리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승부처인 두 곳에서 총력을 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야권 단일화 성공으로 재보선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남은 이틀간 단

일화 성과가 승리로 귀결돼 2인자 실세를 확실히 삼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정권의 상징 인물이 출마한 이 두 지역에서 단일화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이 지역일꾼론을 뒤집으면 그 효과가 전체 관세에 파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 지역에 정 대표 외에도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을 보내 막판 표심 잡기에 최선을 다했다.

윤호중 선거기획단장은 단일화의 파급력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 4대강 저지를 위한 투표라는 이번 선거의 성격이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6·2 지방선거의 충격적 패배를 겪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 한나라당이 계파 해체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계파 해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하고 “홍준표 최고위원이 제기한 당내 계파 해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로 계파가 나뉘어 있는 상태로 가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며, 계파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모임은 정책 중심으로 하되 의식적으로라도 계파로 분류된 의원들이 함께 섞여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모든 최고위원이 계파 모임 해체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28일 안상수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안국포럼’, 친박계 의원인 ‘여의포럼’ 등이 해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해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은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

될 전망이다.

최고위의 이날 결정은 일단 계파도 임부터 원칙적으로 해체되되, 굳이 계파별로 모인다면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계파를 떠난 친이-친박 의원의 혼성모임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 정치색이 짙은 모임이고, 어떤 모임이 정책 모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구체적 범위가 제시되지 못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 논의는 구체적인 모임이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체는 강제성이 없는 외부의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점도 그 실효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계파를 인위적으로 해체한다고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없애지 않으면 또 다른 이름의 모임으로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계파 해체라는 대외용 이벤트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계파 수장 간 진정한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모임을 해체시켜도 계파는 남아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남광주농협은 남구선거위원회 회의실에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 남광주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40% 미만일 경우 500만원, 40% 이상이면 1000만원을 남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

◇한나라당=야권후보 단일화를 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단일화 효과’ 차단에 나선 것. 조해진 대변인은 민주당 정상 후보가 은평을의 단일후보로 결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임을 하루 남겨놓고 야당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는 것은 보름 가까이 후보들을 평가해 왔던 은평구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자기들이 단일화했으니 특정 후보를 짚으라는 것은 유권자들을 ‘주머니 안의 공작물’로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깃발 아래 맘대로 줄 세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은평구를 야 바꿔므로 만드는 ‘단일화 정치쇼’는 민심의 반란처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 출신 유원일 의원 각목 테러 당해... 경찰 수사

무안 출신의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비례)이 4대강 사업 반대 농성을 벌이다가 찬성론자들로부터 ‘각목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 의원은 26일 “어제 오후 5시 반경 100여명의 사람들이 경기도 여주군 이포도 인근 장승골농성현장

지원 상황에 몰려와 욕설을 퍼부으며 천막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했으며 그 중 한 사람이 유 의원에게 20cm의 각목을 휘둘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유 의원은 왼쪽 다리와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고 양평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이곳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속 타들어가는 민주 지도부

재보선 막판 접전 양상 우세 1~2곳 불과 대부분 전략공천... 패배면 책임론 불거피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재보궐 선거 관세가 막판까지 접전 양상을 나타내면서 민주당 우세 지역은 1~2곳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8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5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5~6곳 이상에서 승리해야 ‘본전’인 상황이지만 현실

은 녹록치 않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대부분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또한, 서울 은평 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 지도부의 타격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병운 민주노동당 후보와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 남구 선거 결과도 민주당 지도부의 희비를 가릴 전망이다.

만약, 장병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광주 민심의 ‘민주당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입지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성적표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오는 9월 정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 대표는 물론 당내 주류 세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당내 비주류 세력은 재보궐 선거 결과를 내세우며 당내 쉐인 등을 주장하며 정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막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광주 남구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틈만 나면 남구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지원을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서울 은평을은 물론 충남 천안,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등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최인가 “혁신도시 청사 발주 지역건설업체 40%이상 확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장인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 대표인 민주당 최인가 의원(나주·화순)은 2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공청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준용,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은 40%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다”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청사건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고시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건의가 실현되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15개 기관의 부지매입비 3813억원을 제외한 청사이전 건축비 1조370억원 중 상당액이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비로 책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사찰 진상조사위’ 구성

민주당은 26일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현 정부의 사찰이 5공 유신 때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내에 ‘이명박 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등 전반적 사정 문제가 실제보다 축소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리실이) 한나라당 중진 의원 부인들을 사찰했고 국정원은 민주당 간부들 즉,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서, 이화영 전 의원 등에 대해 모든 전화통화를 점검하고 소환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실을 완전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8월 학기 신(편)입생 모집

교수진	생활관 중추기념 - 신입생 전원 장학금 50% 지급!
<p>총장 김원수 (신학박사)</p> <p>총무 김민서 (신학박사)</p> <p>학장 김민서 (신학박사)</p> <p>학감 김민서 (신학박사)</p> <p>학부장 김민서 (신학박사)</p> <p>학부장 김민서 (신학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하고 활동적한 (교과외) 전공(영어, 체육활동) · 입학비 70% 장학금, 전액사 장학금(학부생) · 여자특성 학교 · 전라 지역대학에 4년, 대학원(대학원)에 2년 · 내국대학 재학입학(부수) 입학 · 전공(영어) 장학(대학원)에 50% 지급 · 컴퓨터(영어) 장학(대학원)에 50% 지급 · 학부(대학원) 장학(대학원)에 50% 지급 · 학부(대학원) 장학(대학원)에 50% 지급 · 학부(대학원) 장학(대학원)에 50% 지급

광주바이블칼리지 새원사회교육원

WWW.WBVCOLLEGE.COM

010-9701-1111